자영업자 수수료 최대 年 505만원 줄어

카드수수료 개편안…연매출 5~10억 1.4%, 10~30억 1.6%
수익자 부담원칙 고비용 마케팅 개선…서비스 혜택 축소

금융당국이 내놓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은 경기 침체에 인건비·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제도에 따라 실실질적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영세·중소 가맹점 대신, 연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주력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이번 개편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해 해결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카드 제휴 할인, 캐시백포인트 적립, 사은품 제공 형태로 이뤄지던 카드사 서비스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왜 규모가 큰 가맹점이 혜택을 받나=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를 추진해왔다. 이 때마다 혜택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에 집중됐다.

2012년에는 매출액 2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낮췄고 2015년에는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더 낮췄다. 여기에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도 2.7%이던 수수료율을 1.3%까지 인하했고 지난해에도 2~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0.8%로, 3~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5%에서 1.3%로 낮췄다.

이러다 보니 현행 영세·중소 가맹점은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반면,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은 2% 내외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침체에 인건비·임대료 인상 등도 버텨내기 쉽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들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도 누리지 못해 불공정 문제가 제기돼 온 계층이다.

◇수수료 인하 혜택은 얼마나되나=우선,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도 우대 수수료율 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낮아진다.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도 2.21%에서 1.6%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내려간다. 이렇게되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이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까지 확대된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 카드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떨어지고 100억~500억원 구간도 2.17%에서 1.95%로 낮춘다.

연 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의 99%라는 점에서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연 매출 기준 5억~10억원 이하 19만8000개 가맹점은 이로 인해 연평균 147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담배판매 편의점의 77%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이번 개편으로 연 매출액 5~10억원 구간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도 214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0억~30억원 이하 4만6000개 가맹점도 연 평균 505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된다.

◇무이자할부·포인트 적립 혜택이 줄어드나=그동안 카드회원들의 경우 카드 포인트와 할인 등 부가서비스로 연회비의 7배 수준을 돌려 받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 부가서비스 혜택 규모는 약 5조8000억원인 반면, 카드사가 받은 연회비는 약 8000억원 수준이다.

소비자들이 받는 이같은 혜택이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토록 유도키로 했다.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제공하는 3~6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나 휴가철 워터파크, 호텔 이용권 할인 혜택, 겨울철 스키장 할인, 졸업 입학철 전자제품을 살 때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를 더 주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아이 LOVE 이벤트' 당첨 고객 경품 증정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6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으로 '아이 LOVE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들을 초청해 경품 증정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이벤트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광주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로 아동수당을 수령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산 추첨을 통해 총 23명의 당첨자를 선정했다.

1등 당첨자 1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권이 전달됐으며, 2등 1명에게는 백화점상품권 100만원권, 3등 1명에게는 백화점상품권 50만원권, 행복상 20명에게는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이 전달됐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미래의 재원인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광주은행을 성원해주시는 고객님들이 있기에 지금의 광주은행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 함께 동행하는 100년 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중기·예비창업자 대상
'시제품제작터 지원'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제작터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접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제품제작터 지원 사업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3차원프린터, 3차원스캐너, 머시닝센터와 NC선반과 같은 장비들을 구축하고 전문가들이 제품개발 초기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기업이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해 66개 업체에게 116건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82개 업체 82건을 지원한 바 있다.

실제 지역 기업인 ㈜라이브맥은 수입에 의존했던 베일러 주요 부품들을 3차원스캐닝을 통해 형상데이터를 획득, 이를 이용해 제품의 설계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작업성능이 뛰어난 베일러 부품 국산화에 성공해 해외수출까지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제품제작터 이용은 중기부 광주전남청 제품성능기술과 전화(062-360-916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83.02 (+25.54)	금리 (국고채 3년)	1.91 (0.00)
↑ 코스닥	695.36 (+12.30)	↓ 환율 (USD)	1128.90 (-1.60)

내년 1월 상조업체 대규모 폐업 우려

자본금 15억 미만업체 퇴출
공정위, 63개 업체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퇴출되는 내용이 담긴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146개 상조업체 중 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50개(34%)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사대상은 자본금 조건 미달 업체 중 올해 상반기 이미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개 상조업체다. 자본금 증액 진행 상황과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예정으로, 증자가 어려울 경우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 때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하는 상조공제조합이 대규모 폐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도 조사한다.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피해보상률 저조,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도 함께 점검한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계약 해제 등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상조업체가 폐업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기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며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과 횡령 등 다른 불법행위도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지역인적자원위, 580여명 일자리 창출 성과

청년JOB희망팩토리 등 추진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광주인자위)의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인자위에 따르면 인자위는 올해 '지역 산업을 선도할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일학습병행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등을 추진, 58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뤘다는 것이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1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372명에 대해 채용예정자 양성훈련을 진행하고 3073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했다.

특히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으로 광주형일자리 확산사업, 청년JOB희망팩토리 등 7개 분야에서 18개 사업을 추진, 580명의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졌다는 게 광주인자위 설명이다.

광주인자위는 더 나아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수기공모전을 실시, 우수사례를 유관기관 및 훈련 담당자와 공유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지역 산업·기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광주인자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역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목표로 인력양성훈련과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아 운영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중이며 지역기업 및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인력양성계획을 수립, 다양한 맞춤형 인재 양성교육을 추진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